촛불 다시 타오르나

쇠고기 고시·강경진압 반발 확산…광주·전남 대규모 집회 예고

정부가 26일 미국 쇠고기 수입고시를 강행한 데 이어, 촛불시위에 대해 강경진압으로 방향을 틀면서 소강상태를 보였던 촛불집회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종교계는 정부의 고시 강행조치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광주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주말동안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정부 고시 반발 확산**=윤광장 5·18재단 이사장, 김용채 변호사 등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원로 30여명은 26일 "정부가 고시 철회와 전면 재협상 요구를 끝내 거절한다면 정권 심판 투쟁을 벌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농민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 30여명도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한나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 강행에 항의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날 금남로 가톨릭 센터에서 고시 철회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뒤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전남진보연대는 조선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고시 강행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조합원 300명도 이날 오후 금남로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대규모 촛불집회 재연되나**=국민대책위는 28, 29일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고시강행 저지·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촛불집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고 29일 오후 2시 경복궁역과 광화문에 집결해 장관 고시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도 같은 날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고 시·도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4만명을 비롯,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참여한 6·10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가 재연될지는 불투명하다. 시민들의 피로가 누적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청와대 인적쇄신, 쇠고기 추가협상 및 후속조치 등에 동조하는 기류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섣부른 고시 강행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데다 그동안 관망자세를 보여왔던 시민·사회단체의 촛불집회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규모 집회 가능성도 크다. 결국 오는 28일 촛불집회 참여인원과 시위양상이 향후 촛불집회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평화시위 계속될까**=광주에서 촛불집회는 앞으로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 집회의 양상에 따라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비폭력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이지만,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지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총파업 출정식에서 "다음달 2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삭발 항의 광주·전남 농민연대 소속 100명은 26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전남 시도당사 앞에서 '쇠고기협상 고시강행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대표자들이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정섭 담양군수 구속

뇌물수수 혐의…郡政 차질 우려

승진 대가와 관급 자재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이정섭 담양군수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유승룡 부장판사(영장전담)는 2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정섭 담양군수의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개월간에 걸쳐 군청 압수수색과 공무원 소환 조사 등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담양군 행정은 이 군수의 구속으로 인해 더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이날 이 군수를 구속 수감하고, 이 군수에 대한 여죄를 추궁할 예정이다. 앞서 인사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아 이 군수에게 전달한 이 군수의 친형과 아들이 이미 구속됨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집안에서 모두 3명이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담양군수로 당선된 뒤 2006년 6월과 같은 해 10월, 12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승진이나 채용을 대가로 승진 대상 공무원 등으로부터 모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군수 취임에 앞서 관급 자재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지방선거를 전후해 문중으로부터 정치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외 의사면허 취득 미끼

前 대학교수가 억대 사기

전남지방경찰청은 26일 "해외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수강료를 가로챈 전직 대학교수 김모(51)씨를 사기 및 고등교육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광주의 한 2년제 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뒤 응시하면 필리핀 정부의 동양의학 의사면허를 딸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생활정보지 등에 실어 수강생 51명으로부터 수강료 1억2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학과장 시절 이 대학 강의실 2곳에 자매결연 대학인 필리핀 P의과대 광주캠퍼스를 개설해 졸업한 제자 등을 수강생으로 모집, 1인당 50만~750만원의 수강료 명목으로 받아 이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실제 교수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주말에 해부학·의학용어·침술·경락 등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이 교육을 4~6년간 받고 졸업하면 필리핀 정부의 동양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할 경우 해외 각국에서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고 수강생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경찰이 인터폴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P의과대를 졸업해도 필리핀 전통대체의학 시술자 자격이 주어질 뿐 필리핀 정부에서 실시하는 해외의사 면허 취득 시험은 애초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황정민 아나운서 '촛불 발언' 논란

쌍나팔

○…KBS 황정민 아나운서가 라디오 프로그램 생방송 도중 촛불집회와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

○…황 아나운서는 지난 26일 KBS 2FM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에 대해 "고시를 연기하겠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일이 진행돼 시위대가 흥분했다"며 "경찰의 물대포야 기대한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위대의 과격해진 모습은 많이 실망스러웠다. 새로운 시위문화다 뭐다 보도했던 외신들이 이제 다시 '그럼 그렇지'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신중치 못했다", "소신껏 잘했다"고 반응이 엇갈렸으며, 황 아나운서는 이날 방송 도중 청취자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 /연합뉴스

'촛불' 충돌 150여명 부상…139명 연행

경찰, 엄중 사법처리

서울경찰청은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벌어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도심 거리시위에서 모두 139명을 연행해 이 중 134명을 서울 시내 15개 경찰서에서 나눠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139명의 연행자 숫자는 지난달 31일 밤~이달 1일 새벽 228명이 검거된 이후 이번 '촛불사태' 들어 최대 규모다. 경찰은 연행된 139명 중 고령자인 나모(79)씨의 경우 나이를 고려해 일단 석방한 뒤 추후 조사키로 했으며 중·고교생 또는 중퇴생으로 확인된 10대 청소년 4명은 훈방조치했다.

경찰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과정에서 심하게 저항하고 교통을 방해한 과격 행위자를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행자 중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안모(35) 팀장 등 집회 주최측 관계자와 일부 폭력 시위자들은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25일 밤샘 시위로 시민 100여명과 경찰 56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경찰청 인권위원 14명 전원 사퇴키로

경찰 과잉 진압 반발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박경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전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촛불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를 포함해 14명의 학계·시민사회계 인사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 방식 등을 비판하며 위원직 전원 사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인권위원 중 한 명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이 모두 '인권친화적인 경찰과 거리가 멀다'며 촛불과 관련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 우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만두자는 논의가 나왔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교통 경찰관이 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현직 교통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동구 지원동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박모(46) 경사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등과 배전함을 들이받았다.

박 경사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였으며,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면허를 취소했으며, 자체 감찰조사를 벌여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